

# 교수 없는 AI대학원 될라… 겸업금지에 전문가들 ‘손사래’

## 미국선 구글서 100억 연봉, 폐북 연구직 겸직교수도

“3년내 1000명 AI 인재육성”  
카이스트 등 5곳 대학원 선정  
교원충원 난항 대학들 ‘한숨’  
겸업금지 폐지, 지원금 늘려야

정부가 ‘AI(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조만간 발표하지만 AI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수는 ‘하늘의 별따기’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발전 근간인 AI 인재양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준비했던 대학들이 교원 충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가 ‘2022년까지 고급 AI 인재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달린 상태다.

### ◆겸업금지 조항 손봐야

올해 초 1차 AI 대학원 지원사업에는 고려대, 성균관대, 카이스트 등 3곳이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 29일 포항공과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추가로 지정됐다. 문제는 연구 환경과 보수다. 인재를 영입하려면 대상자(교수)가 연구에 몰두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연구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연구의 확실한 자율성 보장이 현재 상태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AI 대학원에 선정된 대학 관계자들은 공공이나 사기업이 채택한 ‘겸업금지’ 조항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단순히 기업과 대학 한 곳에 끌어두는 것은 인재 수

급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정송 카이스트 AI 대학원장은 “학교의 재정이 제한적인 만큼 기업과 연계해야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대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는 교수 연봉 외에도 구글 브레인을 이끄는 대가로 구글로부터 100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AI 학자 반열에 오른 조경현 뉴욕대 교수도 페이스북의 연구직도 겸하고 있다.

### ◆국가 차원 지원도 필요해

국가 차원에서도 AI 대학원 등에게 인재 수급과 인프라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성환 고려대 AI 대학원 주임교수는 “AI를 학교에서 가르칠 실력이 되는 인재라면 대학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몸값이 비싸다”며 “전문가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 재정으로는 실력 있는 교수 충원이 어려울 것 같아 앞날이 더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원장 역시 “학교가 제안할 수 있는 연봉은 한계가 있다”며 “100억원씩 10년간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과제 등 다양한 사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AI 대학원에는 학기당 10억원 가량의 지원금이 주어지는 실정을 염두한 것이다.

다만 AI 인재 배출에 급급해 양적 확장만을 노린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AI 대학원은 국내 AI 정책과 교육을 이끌 최고급 인재 배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 숫자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고 했다.

### ◆초중등 SW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해야

AI 전문인력 양성은 대학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즉, 초중등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영역은 소수 대학원 운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40여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SW 중심대학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인공지능 교육 추진을 유도해 근본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고 이게 인공지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교육 제도를 바꾸고 컴퓨터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래밍



고려대 인공지능 대학원 개원식.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 여섯번째)과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이성환 주임교수(오른쪽 여섯번째). /고려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대학들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역량과 인공지능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체질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환경이 ‘전임교수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유 교수는 “AI 대학원만을 전임하려는 교수는 거의 찾기 힘들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한계와 실망감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

두 차례 ‘AI 원터(Winter)’를 겪은 적이 있는데, 이에 ‘AI 원터’가 찾아올 것 이란 염두를 항상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원터’가 다시 찾아오면 AI 대학원에 문을 두드리는 인재들이 적을 것 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AI 대학원 전임 교수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학과도 전임할 수 있는 전임교수 겸직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 정부 ‘AI윤리’ 마련 본격화

방통위, 이르면 이달께 발표  
과기부, AI윤리원칙 연구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이나 내달 중 인공지능(AI) 윤리원칙을 제정해 발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윤리원칙이 필요한 지를 놓고 정책 연구에 돌입하는 등 정부의 AI 윤리지침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해 AI 전문가들과 AI 윤리원칙 초안을 마련했지만 AI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AI 윤리원칙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우리가 통신이용자를 보호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AI 윤리원칙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원칙들을 주로 반영하고 있다”며 “인간 중심의 원칙,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알고리즘 설계, 차별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I 윤리원칙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며,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적용해야 하

는 원칙이어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느라 당초 예상보다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직은 지능 정보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당장 법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능정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 간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한 “앞으로도 수차례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며, AI 윤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12월 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공동으로 AI 윤리원칙을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지능정보 사회 이용자 정책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산업계·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면에 계속

/채운정 기자 echo@

**2019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19  
www.kimex.or.kr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장흥군 안양면 로하스로 157

**2019.10.07 (월) - 10.13 (일)**

주최 | 전라남도 Jeolla Namdo, 장흥군 Jangheung County  
주관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후원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